

# “한일군사정보협정 ‘굴욕적 매국협상’ ”

### 정부가 국무회의 통과시킨 데 대해... 야3당, 협정 체결 중단·폐기 요구하며 박 대통령 비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2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일제히 반발하며 협정 체결 중단과 협정안 폐기를 요구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순실 등 범죄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고 검찰에 의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현직 대통령이 과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같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할 자격과 권한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같은 당 박경미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계

이트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도 모자라 급기야 외교와 안보까지 파탄을 내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담보로 한 위험한 불장난을 당장 중단하라”고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굴욕적 매국협상”이라며 “우리 당은 밀실·졸속·굴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용납할 수 없고 이 협정을 주도하고 동조한 모든 책임자들에게 그에 따른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을 비난했다.

민주당 내 독립유공자 유족인 살훈·이종걸·우원식·이용득 의원은 이날 공동 성명에서 “협정 체결을 강행한다면 100만

이 200만이 되고 300만이 된 촛불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릴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거스른 협정체결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어 권좌에서 내려오라”고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탄핵, 퇴진을 앞두고 그렇게 반대했는데 불구하고 국회와 전혀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중로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현 식물정권이 절차와 시기를 무시하고 납치기식의 협정 체결을 통해서 국회비준동의권에 대한 침해와 헌법정신을 파괴하고 대다수 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과 함께

하지 않는 안보가 성공할 수 없다는 그의 말을 잇은 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 뿐 아니라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아심을 버리지 않는 일본 자위대를 통해 서해·남해로 끌어들이는 것은 그 자체로 탄핵 대상”이라며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폐기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위안부 협정과 같이 굴욕적으로 체결된 이번 협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며 “이를 저지한 박 대통령과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외교 당국 책임자들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국회는 진상조사 등을 통해 이번 협정의 내막을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

### 안철수 “박 대통령 ‘3단계 질서 있는 퇴진’ 을”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3단계 질서 있는 퇴진’ 을 촉구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21일 군산대학교에서 ‘비상정부 해법과 대한민국의 미래’ 를 주제로 특강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강연을 통해 “대통령의 직무는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정부 공적 시스템을 악용해 국가기관을 개인회사처럼 만들고 개인 돈처럼 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사태를 수습하고 다른 나라와 제대로 외교적인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6개월”이라며 “대통령이 빨리 물러나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대통령이 퇴진을 약속하고 여야 합의로 총리를 선출한 뒤, 그 총리가 정국 수습에 대한 계획을 발표해야 할 것”이라며 “그 이후에 대선을 치르는 3단계의 질서 있는 퇴진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 김광수 의원, 예산소위 소소위위 배정

전북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배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은 22일 “국가 예산을 사실상 심의하는 예산안조정소위 소소위원회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예산과 특정지역에 편중된 예산과 불요불급한 국정 홍보 예산 등을 중점 심사, 삭감하고 있다”면서 “삭감된 예산이 전북을 비롯해 지역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및 복지 예산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새누리당 도당 사무처장에 정경복 씨

새누리당이 전북도당 신임 사무처장에 정경복(58) 전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사를 임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신임 사무처장은 정경복 출신으로 원광대 토목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새누리당 전북 누리스타 봉사단 부단장과 제6회 지방선거 새누리당 전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 완주전주 상생협력 민간공동 대책협의회 공동대표를 지냈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사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감사 등을 역임했다. /고민형 기자

### 도의회 교육위, 행감 불참 김 교육감 에 과태료

전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과태료를 부과기로 했다.

22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3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 교육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교육위는 “도교육청 당면 현안문제 등에 교육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행감 증인 출석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김 교육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것에 따른 것”이라 밝혔다.

교육위는 이어 “남원교육문화회관 관공의 업무과외 미비를 비롯해 자료 불성실 제출과 제출자료 오류, 도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의 불성실한 답변태도 등 김 교육감의 불출석 사유서와 정반대로 행감 답변이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행감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들이 충실히 답변을 준비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교육감보다 자세하게 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불출석 사유서를 교육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교육위는 김 교육감의 불출석 사유서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 지방자치법 제43조 4항과 전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기로 했다. /고민형 기자



“사랑이 아프니?” 22일 전주시 효자동 한 치과 건물에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0·구속)씨 국정농단 사태를 풍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 김관영 의원, 20대 국회 법안발의 실적 5위

### 52건 발의로 도 국회의원 중 1위... 상위 10명 가운데 5명이 국민의당 의원

20대 국회 국회의원 법안 발의 실적을 집계한 결과 상위 10명 가운데 5명이 국민의당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군산)은 52건의 법안을 발의해 전체 5위, 전라북도 의원 중 1위를 기록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21일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법

안 발의 실적(2016년 5월30일~11월18일)에 따르면 김관영 의원은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건수 49건, 정부개정법률안 3건으로 전체 52건을 발의했다.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법안 발의 실적도 눈부셨다.

법안 대표발의 실적 상위 10명 중 5명(주승용, 황주홍, 김관영, 김삼화, 최도자)이

국민의당 의원들로 채워졌다.

김관영 의원은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일당백의 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며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 양질의 법안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민형 기자·군산=문정곤 기자

행복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선거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 “ 세상을 가꾸는 노력, 당신의 정치후원금이 큰 힘이 됩니다 ”

SES 이나운서 정민선

KBS 이나운서 김민영

**정치후원금이란?** 정당 및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기탁금과 후원금 등이 있습니다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에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

**후원금이란?**

특정 국회의원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

**온라인 정치후원금센터** 인터넷 검색창에서 정치후원금센터를 검색하세요

**결제방법**

- 신용카드 결제
- 신용카드 포인트 복합결제
- 실시간 계좌이체
- 휴대폰 요금 결제
- 간편 결제: Kakao Pay, PAYCO, Paynow

**신용카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 기부하기**

정치후원금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 공제

깨끗한 정치문화 만들고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이해 10만원 초과

전액 세액공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

1천억원

MBC 이나운서 박현선